

## 기부금 공제가 인정되는 자원봉사활동(용역기부)의 확대

수행과제명 : 여성자원봉사활동의 경제적 가치와 지원방안 연구

과제책임자 : 조선주 연구위원

Tel: 02-3156-7109, e-mail: sjcho@kwidimail.re.kr

### 요 약

- 소득공제 인정액 : 정책의 시행초기에는 1일 5만원 상당의 기부금으로 인정하고, 제도 정착기에는 100% 상 향조정, 제도 안정기에는 기본공제처럼 100만원 공제 등 단계적 확대
- 소득공제 인정 영역 : 기부금 공제가 인정되는 자원봉사활동 영역의 확대
- 소득공제 인적 범위 : 자원봉사활동의 기부금 공제의 인적 범위 확대

## 1. 정책의 목적 및 필요성

□ 소득세법 §34의2, 소득세법 시행령 §81⑤,⑥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자에 대하여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에서 기부금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음

- 봉사활동에 대한 가액 산정

- ① 자원봉사용역의 가액 = 봉사일수 × 5만원
- ② 봉사일수 = 총봉사시간 ÷ 8시간(단, 소수점이하는 1일로 계산)
- ③ 당해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 · 재료비 등은 제 공할 당시 시가 또는 장부가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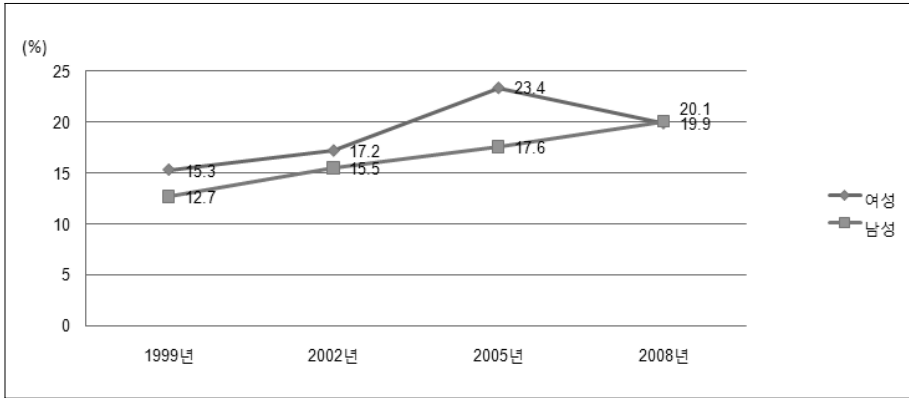
- 방법: 특별재난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자원봉사센터장으로부터 발급받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위 확인서를 제출하여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



<그림 1>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가치 인정 체계

## 2. 정책의 추진방향

- 지난 10년간 한국의 여성 자원봉사활동의 추이를 살펴보면 15.3%에서 19.9%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. 인구의 5명 중 1명이 자원봉사활동의 경험이 있으며, 자원봉사활동인구의 74.1%가 여성임
- 이처럼 정부는 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,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등을 통하여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기여하고자 하고 있음



<그림 2> 10년간 자원봉사활동 추이

### 3. 정책효과

□ 자원봉사 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계산한 결과 20세 이상 자원봉사 인구 노동의 연간 경제적 가치는 36,801억원이며, 남성의 경제적 가치는 25,304억원으로 여성의 11,497억원보다 13,807억원 많은 것으로 나타남

- 이 수치는 2008년 GDP의 0.35%를 차지하는 비율이며, 2008년 정부일반예산(174조원)의 2.1%를 차지하는 비중임. 또한 사회복지예산의 21%에 해당하는 수치임. 즉, 정부가 공급하는 사회복지부문의 공공서비스 21%를 민간의 자원봉사활동에 의해 공급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여도 과언이 아님

□ 정책적 논의들을 바탕으로 시나리오 설정 후 정책 시뮬레이션을 실시함

- 시나리오1은 근로소득공제, 시나리오 2는 근로소득공제+일당(5만원)을 공제, 시나리오3은 근로소득공제+일당(10만원, 즉 100%상향 조정)을 공제하는 경우임

□ 소득공제혜택이 주어졌을 때, 여성의 경우 자원봉사활동 시간이 증가하는 비율은 87.7%(887명)였으며, 감소하는 비율은 2.3%(124명)로 나타남. 반

면 남성 자원봉사활동 시간이 증가하는 비율은 80.0%(782명)였고, 감소하는 비율은 20.0%(196명)였음

- 이는 여성들의 다수가 자원봉사 시간에 대해 소득탄력성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,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여 근로소득 공제를 통하여 과세표준을 낮추어 주는 것은 여성의 자원봉사활동참가에 미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임

□ 소득공제혜택으로 인한 세수의 감소분보다 더 큰 경제적 가치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음. 그러나, 자원봉사활동 시간의 변화는 매우 미미함

- 자원봉사실태를 바탕으로 한국의 자원봉사참여율이 20%정도라고 가정할 때, 전체인구 약 5천만 명의 20%, 1사람당 5만원으로 환산하면 5천억 원(천만 명x5만원)정도 소득공제가 있을 수 있음
- 최저세율은 6%로 실제 세수가 줄어든 것을 계산하면 300억 원의 세수가 줄어든다고 할 수 있음. 경제적 가치의 추정치는 약 36,801억 원임

---

▶ 주관부처 : 기획재정부(소득세제과)  
▶ 관계부처 : 보건복지가족부(사회서비스자원과), 여성부(복지지원과),  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행정안전부(민간협력과)

---